



주간 통일정세

2007-0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관련 2. 주변국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북한 수해 피해 관련

● 도로복구에 주력

- 평양-신의주 도로는 중국 단둥(丹東)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류와 평양에서 외국으로 상품을 실어 나르는 경의선 도로 북쪽 구간으로 북한은 완전복구에 매진하고 있음(9/16, 조선중앙방송)
- 지난달 집중호우로 파괴된 도로 복구율이 80%에 이르고 있음(9/12조선중앙방송)

● 수해관련 피해 내역 공개

- 국제구호개발기구인 월드비전의 빅터 슈 북한 회장은 14일 “평양의 적십자 담당자로부터 의료시설과 의약품 등 전체 의료 인프라의 30%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들었다”며 “현재 북한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민들의 건강 문제”라고 전언(9/14, 연합)
- 수해로 학생 3만5천명 교실 잃는 피해(9/14, 미국의 소리방송; 9/4, 조선신보)

● 북한주민, 대북지원 남한에 감사 전달

-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수해지원 물자를 받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11일 보도(9/11, 조선신보)
-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해에 위로 전문을 보낸 외국 정상들에 대한 답전으로 “깊은 사의”를 표한 바 있으나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엔 아직 공식적인 회신은 없는 상태임

나. 사상교양 강조

● ‘준법’ 정신 강조로 ‘법적투쟁’ 강조(9/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사회주의 법무생활과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사회주의법을 떠나서 사람들의 집단적이며 조직적인 행동을 보장하고 사회의 질서를 정연하게 유지하는 데 대해 생각할 수 없다”며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본성적 요구”라고 주장
- 또한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는 집요하고 뿌리가 깊은 만큼 교양(교육) 하나만으로는 없앨 수 없다”며 “교양사업과 함께 사상투쟁과 법적 투쟁을 강화해야 온갖 불건전한 사상 요소를 철저히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



2. 대외정세

가. 북핵관련

- 북한·시리아 핵 의혹 관련 부정(9/16, 연합)
 - 김명길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시리아간의 핵 커넥션 의혹이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항상 하는 근거 없는 소리들”이라며 이를 일축
- ‘상당기간 복구불가’ 불능화 방안에 대한 북한 당국 공감 전달(9/16, 연합)
 - 북한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핵기술팀과의 협의과정에서 현안인 핵시설 불능화와 관련, ‘연내 이행’을 전제하면서 ‘일단 불능화 조치를 취할 경우 상당기간 내 복구가 어려운’ 수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3국 기술팀에 5MW 원자로 등 핵심 시설의 설계도면까지 제시했으며 향후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이 확정될 경우 불능화 작업을 미국 주도의 핵기술팀이 담당하는 것도 사실상 받아들였다고 함.

나. 북·미관계

-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제한 북미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 동시 체결 필요성 제기(2007.2호, 정치법률연구)
 - 북한 정치.법률분야 계간지 「정치법률연구」 최근호(2007년 제2호, 6월7일 발행,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 최현철은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조미대화와 협상을 진행하는 데서 자신이 지닌 국제법적 의무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국제법적 의무들’로 대북 적대시정책의 완전 포기, 평화협정과 불가침조약을 동시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그는 “평화협정은 상대방에 대한 불가침을 법적 의무로 지니는 불가침조약 체결로 이어질 때 비로소 공고한 평화를 담보해줄 수 있다”고 하면서 “지체없이” 주한미군과 장비들을 철수해야 하며 “그에 기초해 미국은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

다. 북·일 관계

- ‘일본군국주의’ 비난을 통한 대일성토 강화 (9/15, 노동신문)
 - 일본의 테러대책특별조치법 연장 시도, 항공자위대 나하(那覇)기지에 F15 전투기 20기 배치 등을 군국주의 움직임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도로 북일 관계가 폭발 직전에 있다고 비난



- 북한의 대일관계 정상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폭(9/14, 조선신보)
 - ‘조(북)일 관계에 대한 평양사람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총리가 바뀌어도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관계개선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남의 나라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베 총리사임의 소식에 관심을 표시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전하고,
 - ““납치총리”라고 불린 인물의 퇴장극을 평양사람들이 악화 일로를 치달았던 조일관계의 국면전환과 결부시켜 보기때문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후임 총리 등장→ 대북정책 전환→ 북일 관계개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판단

라. 북·중관련

- 북·중 3차 경제무역과학 협조위 개최(9/11,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은 지난 4일 베이징(北京)에서 ‘조(북)·중 경제무역과학 기술 협조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
 - 북측에서 리룡남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경제무역 대표단이, 중국측에서는 천젠(陳健) 상무부 부장조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참석

마. 기타 대외관계

- 김영남, 이탈리아 외교차관 면담(9/14, 조선중앙통신)
- 북한·미얀마 ‘외교부 협조 합의서’ 체결(9/14, 조선중앙통신)

3. 대남정세

가. 대남 보도

- 北, 이명박 정상회담·북핵폐기 발언 비난(9/16, 민주조선)
 - 16일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대선후보의 남북 정상회담 문제와 북한 핵폐기 관련 발언 등을 싸잡아 “겨레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북) 측을 자극하여 민족의 통일잔치를 막아보려는 고의적인 역적행위”라고 비난
- 주한미군 철수는 평화수호 근본조건(9/15, 노동신문)
 - “남조선(남한)에서 미제침략군(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근본조건”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에서의 한반도 평화 관련 의제 중 하나로 주한미군철수 주장이 되풀이 될 가능성 상존



나. 남북정상회담 관련

- 북한 당국, 16일부터 민간단체 방북 불허(9/13, 연합뉴스)
 - 북한이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9/2-4)을 앞두고 9/16부터 10/5까지 남측 민간단체의 평양 방문을 허용치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북측은 또 이미 평양을 방문 중인 남측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9/17까지 나가달라'는 입장도 전달

다. 남북교류

- 북-광진공, 자원개발 정례협의기구 구성(9/13, 연합뉴스)
 - 이한호 광진공 사장은 지난 5~8일 평양을 방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광명성 총회사 윤원철 총사장과 만나 남북자원개발 공동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
 - 광명성 총회사는 북한의 대외경제기관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 회사로, 경공업이나 원자재 분야의 대남 경제협력을 수행, 내년 말까지는 남측이, 이후 2년간은 북측이 의장을 맡아 앞으로 평양과 개성 등 북한 지역에서 연간 4회씩 모임을 갖고 지하자원 개발을 협의
- 이산가족 대면상봉 연기 가능성(9/12, 연합뉴스)
 - 제16차 이산가족 대면상봉(10/1~6 금강산) 개최가 시기가 겹치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계로 다소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 남북 당국은 13일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회보서를 교환하면서 일정 조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

북한연구실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미·북 관계

- 미 행정부, 대북 중유제공 계획 의회 통보(9/11)
 -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폐기 초기조치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 '2·13 합의'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중유 5만 톤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의회에 사전 통보 했음.
 - 그러나 미국은 대북 중유제공은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자국 핵프로그램의 연내 불능화 선언을 재확인한 후이나 가능하다는 입장임.



- 미, IAEA 북핵 사찰비용 지원
 - 그레고리 솔트 주IAEA 미국대사는 미국이 IAEA의 북한 내 핵사찰 작업의 진행을 위해 IAEA에 “앞서 51만3천 달러를 지원한데 이어 18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음(9/11).
- 버시바우, “북핵 폐기하면 내년 북·미 정상회담 가능”(9/12)
 -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국가경영전략연구원」에서의 ‘한·미관계 - 현황과 전망’ 주제 발표에서 북한이 핵 불능화뿐만 아니라, 핵을 완전 폐기할 경우 내년 중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 NYT(9/12)·WP(9/13) 등, 북·시리아 핵협력 가능성 판단
 - 「뉴욕타임스」·「워싱턴포스트」 등은 미국이 이스라엘 등이 제공한 시리아의 핵관련 초기 정보를 수차례 재평가한 결과, 북한과 시리아가 미사일 기술협력에 이어 핵분야에서도 제휴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이 이달 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측의 의혹 제기를 충족시켜주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면서 이 같은 의혹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 3국 핵기술팀, 영변 핵시설 방문(9/12~13)
 - 미·중·러 3국 핵불능화 기술팀(미국 7명, 중국 1명, 러시아 1명)이 영변 3개 핵시설(원자로,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공장)을 둘러본 후 13일 평양으로 귀환했음.
 - 기술팀 대표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은 귀환 후 영변 핵시설 방문이 “유익했다”고 말했음.
 - 이들은 북한 측 관계자들과 구체적인 불능화 방안을 협의(9/14)했고 6자회담에 보고해 최종적인 핵불능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임.
- 힐, 북한 핵확산 여부도 신고대상(9/14)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국무부에서 언론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시리아에 핵물질을 판매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핵확산 문제는 이미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북한의 핵확산 관련 정보도 ‘2·13 합의’에 따른 전면 신고대상이라고 밝혔음.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 그는 불능화와 신고의 2단계 이행이 끝나면 올 연말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협정에 대한 최종 서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북한을 종교탄압 ‘특별관심국’으로 재지정(9/14)



- 미 국무부는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 실태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는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을 비롯해 이란, 미얀마, 에리트레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등 8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했음.
- 북한은 2001년부터 7년 연속 미국 정부로부터 '종교탄압국'으로 지정되고 있음.

나. 중·북 관계

- 중, 북한 핵실험 20분전 통보에 분개
 - 일본 『아사히』신문은 중국 공산당과 외교부의 현역 관료로 보이는 익명의 중국인 그룹이 작성한 내부 대북 보고서를 보도했음(9/11).
 -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때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이 실험 약 2시간 전에 본국으로부터 “30분 전에 중국에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대사가 이를 10분 늦춰 20분 전에야 중국 외무부에 연락을 했음.
 - 이 때문에 중국 외교부로부터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에 대한 보고가 핵실험 직후에나 이뤄져 중국 측이 체면을 구겼다고 몹시 분개했다고 함.
- 중, 이달 중 대북 중유 제공
 - 미국의 한 관리는 “중국이 이달 중 북한에 2,500만 달러 상당의 중유 5만 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음(9/13).

다. 일·북 관계

- 일, 영변 핵시설 폐쇄 50만 달러 지원 약속(9/11)
 - 아마노 유키아 IAEA 일본측 대표는 35인 이사회에서 일본이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조치를 확인, 검증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라. 기타 관계

- 유엔보고서, “북한 범죄사업으로 연 5~10억 달러 수익”(9/10)
 - 「유엔협회세계연맹」(WFUNA) 산하 밀레니엄 프로젝트는 연례보고서에서 조직범죄 단체들이 돈세탁, 위조, 마약, 무기밀매, 인신매매 등을 통해 지난 해 2조 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 북한은 범죄 사업으로 연간 5~1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됐음.
- IAEA, ‘2·13 합의’ 초기이행 합의 환영 의장결론 채택(9/14)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9/10~14)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이 합의된 것을 환영하는 의장 결론을 채택하고 폐막했음.
- 이번 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핵 감시검증 비용으로 180만 달러, 일본은 5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음.

2. 주변국 관련

가. 일본

- 아베 일 총리, 사임(9/12)
 - 전후세대 첫 총리 및 전후 최연소 총리로 집권(2006/9/26) 했던 아베 신조 총리가 내각의 정치자금 스캔들, 연금기록 분실, 참의원 선거(7/29) 참패, 건강문제 등으로 불명예 퇴진했음.
 - 자민당 총재 선거(9/23)를 앞두고 온건파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음.

나. 중·일 관계

- 자칭린 중국 정협 주석, 방일(9/12~18)
 - 중국 권력서열 4위의 자칭린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이 일본을 방문하고 주요 고위인사들과 회담을 가졌음.

☀ 동북아연구실 제공